

ASAN
REPORT

중국 전랑외교의 함축성과 전망

이동규

2021년 12월



Asan Report

중국 전랑외교의 함축성과 전망

이동규

2021년 12월

아산정책연구원

우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담론을 주도하는 독립 싱크탱크를 지향합니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 정책-철학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외교와 유관 분야 전문가를 육성해 우리의 미래를 보다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의 견해입니다.

저자

이동규

이동규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이다.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국제지역 대학원에서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를, 중국 칭화대학(清华大学)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구분야는 중국정치외교, 한중관계, 동북아안보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일대일로: 보건 실크로드와 디지털 실크로드의 확장과 그 함의”, “중국공산당의 정치개혁은 퇴보하는가: 시진핑 시기 당내 민주화 변화와 지속성”,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략으로 본 시진핑 사상”, “냉전시기 한중관계의 발전요인과 특수성: 1972-1992년을 중심으로”, “개혁개방 이후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연구” 등이 있다.

목차

요약	6
I. 들어가며	8
II. 전랑외교의 출현 배경	10
1.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국내외 도전과 기회	10
2. 중국의 애국주의 노선	19
III. 전랑외교의 의도	23
1. COVID-19 책임론 회피	23
2. 중국 체제의 우월성 과시	25
3. '책임 있는 대국' 이미지 구축	27
4. 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 약화	31
5. 소결: 전랑외교의 함축성	33
IV. 향후 전망	38
1. 전랑외교의 지속: 국내정치의 안정화 필요성	38
2. 전랑외교의 확대: 경제 제재와 군사 압박	39
V. 나가며: 전랑외교와 한중관계	42
참고문헌	44

그림

[그림 1] COVID-19 팬데믹 이후의 대중 인식 변화	17
[그림 2] 2020년 3~4월 중국의 의료물품 지원 현황	29
[그림 3] 중국의 백신 공급 현황	30

표

[표 1] 미국의 COVID-19 사태 중국 책임론 제기 사례	13
[표 2] 중국의 대호주 경제 제재	31
[표 3] 중국과 EU의 신장위구르 문제 관련 제재 대상 비교	32
[표 4] 중국의 경제 보복 사례	36

요약

2020년 COVID-19 팬데믹(pandemic) 이후 중국의 외교 노선은 기존의 주동작위(主动作为) 노선과는 다른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COVID-19가 미국에서 시작됐다는 음모론 제기, △중국의 방역 성과 및 정치체제에 대한 미화 및 선전, △타국의 방역 상황에 대한 비난 및 조롱, △특정 국가에 대한 외교·경제적 보복 등은 상대국가가 불쾌감과 우려를 느낄 정도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습이 중국의 애국주의 영화 ‘전랑(战狼, Wolf Warrior)’을 연상시키면서, 중국의 공격적 외교 행태는 ‘전랑외교(战狼外交, Wolf Warrior Diplomacy)’라고 불리고 있다.

이러한 전랑외교는 COVID-19의 발병과 팬데믹으로 중국 정부가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COVID-19에 대한 초기 대응 실패로 중국 정부는 대내적으로 시진핑 및 중국공산당 통치체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확대됨으로써 정치안보적 위협에 직면했다. 대외적으로는 COVID-19 사태가 팬데믹으로 발전하면서 COVID-19에 대한 중국 책임론 확산, 중국 체제에 대한 비난과 공격, 반중 정서의 전 세계적 확산이라는 도전을 극복해야 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도전을 극복하고 중국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애국주의 노선으로 형성된 민족주의적 정서와 COVID-19 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소위 전랑외교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2년여간 전랑외교를 통해서 중국 정부는 △COVID-19 책임론 회피, △중국 체제의 우월성 과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이미지 구축, △미국의 반중 연대 약화를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볼 때, 전랑외교는 중국 내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해 당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유도함으로써 시진핑 정부가 직면한 정치안보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었다.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자국의 경제력과 외교력을 기반으로 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압박으로 가함으로써 미국의 반중 연대를 약화하고 장기적으로 중화질서의 재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2022년 제20차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의 3연임의 공식화가 예상되고 있다. 시진핑의 3연임은 정기적인 세대 교체나 집단지도체제와 같은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당내 정치적 관례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국공산당 내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은 자신의 3연임이 자신의 권력욕에 의한 독재정치로

의 회귀가 아니라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드러내고 핵심이익의 수호와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랑외교를 지속 및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이러한 전랑외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외교와 가치외교를 추진하는 현 상황은 미국의 동맹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고 중견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그 참여 정도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미국 및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랑외교를 추진하는 중국은 이를 계기로 한국에게 압박과 회유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중국이 한국에게 가할 외교적·경제적 공세는 물론 해상 충돌, 문화 및 가치 갈등을 계기로 하는 민간 부문에 대한 비난과 여론 공격 등 다양한 압박을 염두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I. 들어가며

시진핑(习近平) 시기 중국 정부는 ‘도광양晦(韬光养晦: 몸을 낮추고 힘을 기른다)’에서 ‘주동작위(主动作为: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한다)’로 외교 기조를 선회했다. 그러나 2020년 COVID-19 팬데믹(pandemic) 이후 △COVID-19가 미국에서 시작됐다는 음모론 제기, △중국의 방역 성과 및 정치체제에 대한 미화 및 선전, △타국의 방역 상황에 대한 비난 및 조롱 등 SNS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국 외교관들의 언행은 상대국가가 불쾌감이나 반감을 느낄 정도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모습은 ‘주동작위’의 외교 노선과는 또 다른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중국 외교관들의 언행은 중국의 애국주의 영화 ‘전랑(战狼, Wolf Warrior)’을 연상시켰다. 이 영화는 중국의 모습을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다른 국가 국민들에게 관대하며, 국제법을 준수하는 세계 주도국으로 미화하고 있다. 특히, 영화 포스터에 명시된 ‘중국을 건드리는 자는 비록 멀리 있어도 반드시 징벌한다(犯我中华者, 虽远必诛)’라는 표어는 자국의 이익을 건드리는 자에 대해서 관용 없이 대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공격적 외교 행태는 ‘전랑외교(战狼外交, Wolf Warrior Diplomacy)’라고 불리고 있다.

아직 COVID-19 바이러스의 기원이 불명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중국의 전랑외교는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COVID-19 중국 책임론에 대해서 자국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자신을 방어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랑외교의 출현 이후 지난 2년여의 기간 속에서 중국 정부는 COVID-19에 대한 중국 책임론 외에도 중국의 방역 성과와 타국의 방역 상황을 비교하며 중국의 우월감을 드러낼 뿐 아니라, 호주 등 다른 국가들에게 노골적인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가해 왔다.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전랑외교는 다른 국가들의 반감은 물론, 실질적인 분쟁과 갈등을 야기하며 중국의 외교 공간을 축소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도 전랑외교로 인한 중국의 고립과 외교적 유연성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0년 4월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COVID-19의 확산으로 세계의 반중 정서가 1989년 톈안먼(天安门) 사태 이후 최악이라는 보고서를 정부 지도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랑외교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세계 각국에 파견된 중국 외교관들의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더욱 확장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전랑외교라는 공세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

가? 그리고 COVID-19 팬데믹과 미중 전략경쟁의 시기에 중국의 전랑외교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미국의 동맹이며 중국의 이웃국가인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본 보고서는 COVID-19 팬데믹 이후 중국의 전랑외교가 출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전랑외교의 의도와 그 함축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전랑외교를 전망하고 그것이 한중관계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생각해 본다.

II. 전랑외교의 출현 배경

1.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국내외 도전과 기회

취임 이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国梦)을 강조해온 시진핑 정부에게 2020년은 중요한 한 해였다. 중국몽 실현을 위한 첫 번째 분투목표인 전면적 샤오캉사회(小康社会)를 실현함으로써 시진핑 및 중국공산당 통치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지지를 결집하여 사회주의현대화강국(社会主义现代化强国)이라는 두 번째 분투목표를 추진할 동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병한 COVID-19이 중국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로 중국 전역으로 확산됐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발전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심각한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했다.

1) 국내적 도전: COVID-19의 확산으로 중국공산당 통치체제에 대한 불신 고조

2020년 12월 말 27명에 달하는 원인불명의 폐렴환자가 보고됐고, 우한중심병원 의사였던 리원량(李文亮)은 2019년 12월 30일에 중국 SNS인 웨이보(微博)에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와 유사한 전염병의 전파 위험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국 방역당국은 이를 유언비어로 규정했고, “역학조사 결과 사람 간 감염에 대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¹ 그리고 20여일이 지나고 나서야 중국 정부는 COVID-19의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제(春节) 연휴 기간이었다. COVID-19는 춘원(春运)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을 틈타 중국 전역으로 급속도로 확산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보다 정치 행사와 정치적 업적을 중시함으로써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2020년 1월 초에는 우한 시급(市级) 양회와 후베이 성급(省级) 양회가 예정돼 있었다. 지방 양회는 지방간부에게 자신의 업적과 정치적 지위를 평가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3월 양회를 위한 사전 보고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도 연기하기 어려운 중요한 정치 행사였다. 또한 신창타이(新常态)와 미중 간 무역 전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국 정부에게 춘제 기

1. “观察 | 庚子春节, 阻击NCP”, 南方人物周刊, 2020.02.18., <http://nfppeople.com/article/9863>.

간 지방 경기 활성화와 그로 인한 경제 부양 역시 필요했다. 우한시 정부가 전염병의 발병을 인지했음에도 그 사실을 축소 및 은폐했던 이유이다.²

이렇게 COVID-19 초기 대응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정보 은폐, 언론 통제, 불투명성과 같은 권위주의체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행태는 중국 국민들에게 2002년 사스(SARS) 사태를³ 상기시켰고, 중국공산당 통치체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표출로 이어졌다. 결국 SNS를 중심으로 시진핑 및 중국공산당 통치체제에 대한 비난과 불만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중국공산당의 통치를 비난하며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요구한 쉬장룬(许章润) 칭화대 법대 교수 및 쉬즈용(许志永) 인권 변호사, 우한 내 인권 침해 상황을 SNS를 통해 보도한 팡빈(方斌), 천추스(陈秋实) 등의 시민기자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2020년 2월 7일 전염병 확산을 경고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제재 조치를 받았던 리원량이 COVID-19 감염 후 장기간의 투병 끝에 사망함에 따라 중국 국민들의 슬픔과 불만이 정부에 대한 분노로 나타나기 시작했다.⁴

한편 시진핑 정부는 2014년 4월 중앙국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총체적 국가안보관(总体国家安全观)’을 제시하고, 외부안보뿐 아니라 내부안보를 강조했다. 국토 및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명목하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 정보 등 11개의 분야에서 중국공산당 통치에 위협이 되는 사안들을 관리하며 내부 통제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⁵ 이는 시진핑 정부가 중국공산당 통치체제의 불안정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
2. 이동규, ‘COVID-19 사태 이후 중국 시진핑 체제의 항배와 과제’,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0.03.13., p. 4.
 3. 2002년 11월 중국 광둥성에서 사스가 발병했을 당시 광둥성 정부는 해외자본 유치와 사회안정 유지라는 명목으로 사스의 발병 사실을 은폐했다. 중앙정부 역시 후진타오 지도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2003년 3월 양회를 앞두고 사스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제했다. 중국 정부의 정보 통제와 미숙한 대응 속에서 사스가 확산되었고 그 결과 중국 내 공황 상태가 발생했다.
 4. ‘Widespread Outcry in China Over Death of Coronavirus Doctor’, *New York Times*, 2020.02.07., <https://www.nytimes.com/2020/02/07/business/china-coronavirus-doctor-death.html>.
 5. 시진핑의 ‘총체적 국가안보관’은 외부안보와 내부안보, 국토안보와 인민안보,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 발전문제와 안보문제를 동시에 중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정치안보, 국토안보, 군사안보, 경제안보, 문화안보, 사회안보, 과학안보, 정보안보, 생태안보, 자원안보, 핵안보 등 11개의 안보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시진핑의 총체적 국가안보관에 대해서는 ‘新国家安全观四大内核’, 人民网, 2014.06.06을 참고.

그런 점에서 COVID-19의 국내 확산과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 표출은 시진핑 정부에게 정치안보적 위협일 수밖에 없었다. 즉, 중국 정부에게 COVID-19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병일 뿐 아니라, 중국공산당 통치체제의 약화를 초래하는 정치적 불안요소인 것이다.⁶ 시진핑 정부는 이러한 정치안보적 위협을 조기에 해소하고 중국공산당 통치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했다. 이를 반증하듯이, 시진핑 주석은 2020년 1월 25일 ‘전염병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에 이어, 2월 4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COVID-19 사태가 “중국의 통치체제와 능력에 대한 중요 시험대”임을 강조하며 강력한 방역체제를 요구했다.⁷

2) 대외적 도전: COVID-19 팬데믹 후 확산된 중국 책임론과 체제 경쟁, 반중 정서

COVID-19가 중국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COVID-19 팬데믹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외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1) COVID-19 책임론

2020년 초 WH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COVID-19를 ‘우한 폐렴’, ‘중국 폐렴’으로 부르는 등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됐다. COVID-19에 대한 중국의 초기 대응 실패로 COVID-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팬데믹이 시작됐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런데 2020년 1월 말 워싱턴타임스(The Washington Times)가 우한 바이러스연구소가 생물학무기연구소일 수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데에 이어서,⁸ 미국의 상원의원인 톰 코튼(Tom Cotton)도 COVID-19가 중국의 생화학무기 개발 과정에서 유출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⁹ COVID-19가 자연 발생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생화학무기 연구 과정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6. 서상민, ‘중국공산당의 위기관리 정치: ‘COVID-19’ 대응의 정치적 논리’, 중국지식네트워크, 2020, pp. 93-96.

7. ‘시진핑, 중 통치체제 시험대…흔들리는 리더십에 위기감’, 한국일보, 2020.02.04.

8. ‘Coronavirus may have originated in lab linked to China’s biowarfare program’, *The Washington Times*, 2020.01.26.,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20/jan/26/coronavirus-link-to-china-biowarfare-program-poss>.

9. ‘Senator Tom Cotton Repeats Fringe Theory of Coronavirus Origins’, *New York Times*, 2020.02.17., <https://www.nytimes.com/2020/02/17/business/media/coronavirus-tom-cotton-china.html>.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한 인명 손실, 사회 및 경제체제의 붕괴, 경제적 손실 등의 이유로 COVID-19 팬데믹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표 1] 미국의 COVID-19 사태 중국 책임론 제기 사례

일자	내용
2020. 03. 19.	-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 백악관 언론브리핑에서 COVID-19를 중국바이러스로 수정 및 강조함.
2020. 04. 15.	- 트럼프 대통령, COVID-19 대응 TF 브리핑에서 미 당국이 우한연구소에서의 코로나 발생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언급함.
2020. 04. 17.	- 론 라이트(Ron Wright) 및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공화당 하원의원, 중국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WHO를 오도한 국가의 '국가 면제(state immunity)'를 박탈하는 '결의안 6524호'를 발의함. ¹⁰
2020. 04. 18.	- 트럼프 대통령, COVID-19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중국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함.
2020. 04. 19.	-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미국무역위원회 위원장,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우한연구소에서 유출되었고, 중국은 COVID-19의 확산을 전략적으로 은폐하여 방호물품을 사재기하고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함.
2020. 04. 20.	-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공화당 상원의원, 중국에게 COVID-19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힘.
2020. 04. 21.	- 미국 미주리 주정부, 중국 정부의 코로나 부실대응으로 초래된 경제적 손실과 고통에 대해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2020. 04. 30.	-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브리핑에서 COVID-19가 우한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증거를 보았으며, COVID-19 사태의 책임을 물어 중국에게 1조 달러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말함.
2020. 05. 06.	-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브리핑에서 COVID-19가 진주만공격이나 9.11 테러보다 더 나쁘고 미국에 대한 최악의 공격이라며 중국 책임론을 재강조함. - 폼페이오(Michael R. Pompeo) 국무장관, 언론 브리핑에서 1월 3일 중국의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바이러스샘플을 파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COVID-19가 우한연구소에서 발원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함.

출처: 언론보도를 토대로 필자 정리.

독일, 인도 내의 민간단체가 중국 정부에게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손해배상 청구는 중국의 입지를 곤란하게 할 수 있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미주리 등 미국 주정부는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 원칙과 미국 내의 외국주권면제특별법(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 FSIA)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를 기소하고 COVID-19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중국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배상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이러한 미국 주정부와 다른 국가들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서 코로나 확산으로 받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게 묻는 분위기가 국제사회에서 조성될 수 있었다.

(2) 체제 경쟁

상술했듯이, COVID-19에 대한 초기 대응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불투명한 권위주의체제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a revision power)로 규정하고¹¹ 적극적으로 견제하던 미국은 이를 계기로 중국공산당 및 중국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과 공격을 시작했다.

2020년 5월 폼페이오(Michael R. Pompeo) 국무장관은 중국 정부의 COVID-19에 대한 대응을 비난하며, 중국은 “악랄한 권위주의 정권이자 공산주의 정권(a brutal, authoritarian regime, a communist regime)”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자유주의 국가들에게 적대적(ideologically and politically hostile to free nations)”이라고 언급했다.¹² 또한, 매튜 포팅저(Matthew Pottinger)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은 버지니아대학에서의 중국 5.4운동 기념 연설에서 COVID-19 팬데믹 시기 중국 정부가 행한 중국의 반체제 인사 탄압과 언론 통제를 비난하고, 중국공산당이 아니라 의사 리원량이 5.4운동의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라며 중국인들에게 중국 공산주의 정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¹³

10. ‘국가 면제’에 의하면 어떤 주권국가의 행위와 재산은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고, 타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COVID-19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중국에게 묻기 위해서는 중국의 국가면제를 먼저 박탈해야 했다.

11. Indo-pacific Strategic Report (2019).

12. ‘Secretary Michael R. Pompeo at a Press Availability, U.S. Department of State’, 2020.05.20., <https://www.state.gov/secretary-michael-r-pompeo-at-a-press-availability-6>.

13. “一个美国视角下的中国“五四”精神”, The White House, 2020.05.04.,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5/2020-Pottinger-May-Fourth-Miller-Center-Speech.pdf>.

한편,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서구 사상의 확산과 그에 기반한 정치변동 요구를 심각한 정치적 위협으로 인식해 왔다. 1986년의 “중공중앙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지도방침에 대한 결의(中共中央关于社会主义精神文明建设指导方针的决议)”나¹⁴ 1996년의 “중공중앙의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 강화와 관련된 주요 문제에 대한 결의(中共中央关于加强社会主义精神文明建设若干重要问题的决议)”는¹⁵ 개혁개방 이후 중국 내로 유입되는 서구사상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우려를 잘 말해준다.

시진핑 정부 역시 2013년 4월 9호 문건을 통해서 서구식 헌정 민주주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서구식 언론의 자유, 신자유주의, 허무주의 등을 중국의 지도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언급하였을 뿐 아니라,¹⁶ 10월에는 개혁개방 후 유입된 일부 서구 사상을 ‘그릇된 사조(错误思潮)’로 규정하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¹⁷ 특히, 시진핑 정부는 서구 사상의 확산에 의한 중국의 정치변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국 특색을 강조하고 중국과 서구를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예를 들어, 시진핑 정부는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핵심가치관(社会主义核心价值观)을 공표하고 중국식 자유와 민주를 강조해 왔다.¹⁸ 이는 각 국가와 지역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유, 민주,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서구식 접근을 부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식 민주와 자유를 강조하며 국내의 정치불만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 시진핑 정부에게 COVID-19 이후 가시화된 미중 간의 체제 경쟁은 중국공산당 통치

14. 이 결의에 의하면, 중국공산당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교육, 과학, 문화 건설을 경시하는 중대실수를 범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역사전통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중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해야 함을 주장했다.
15. 이 결의는 개혁개방에 편승하여 사회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서구 사상을 거론하며 이러한 사상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16. ‘China’s New Leadership Takes Hard-line in Secret Memo’, *New York Times*, 2013.08.19., <https://www.nytimes.com/2013/08/20/world/asia/chinas-new-leadership-takes-hard-line-in-secret-memo.html> (2020년 3월 2일 검색).
17. 그릇된 사조는 △자유, 민주, 인권과 같은 서구의 보편가치, △헌정민주, △역사 허무주의, △신자유주의, △개혁개방 및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대한 의심을 포함한다. ‘巩固党和人民团结奋斗的共同思想基础’, “求是 2013/20,” http://www.qstheory.cn/zxdk/2013/201320/201310/t20131012_278250.htm.
18.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은 12개의 가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강(富强), 민주(民主), 문명(文明), 화해(和諧), 자유(自由), 평등(平等), 공정(公正), 법치(法治), 애국(爱国), 겸업(兼业), 성신(诚信), 우선(友善)이다.

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시진핑 정부가 강조해 왔던 중국 특색은 물론, 중국공산당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중국 정부가 강력한 이데올로기교육과 인터넷 통제로 정치변동 요구의 확산을 차단하고 있지만,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체제 경쟁은 중국 내 중국공산당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촉발하고 확산시켜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을 높일 위험성이 있었다.

(3) 반중 정서의 전 세계적 확산

COVID-19 팬데믹 이후 반중 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0월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시행한 미국, 영국, 독일, 한국 등 14개의 선진국에 대한 여론조사는 COVID-19에 대한 중국의 대응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승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은 중국 정부뿐 아니라 시진핑 개인에게도 이어졌는데, 시진핑이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올바르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증가했다.¹⁹ 한국의 여론조사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한 역사적 사건에서 COVID-19의 발생이 87.3%를 기록하며, 사드 보복(78.9%), 동북공정 등 역사문화 갈등(72.7%)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²⁰

이러한 반중 정서의 전 세계적 확산은 중국의 국가 이미지는 물론 시진핑의 권위가 국제사회에서 크게 실추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취임 이후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외치며 ‘강한 중국’을 강조해 왔다. 즉, ‘신형대국관계(新型大国关系)’, ‘신형국제관계(新型国际关系)’,²¹ ‘인류운명공동체(人类命运共同体)’²² 등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의 역할을 하는 중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며, 중국 국민들의 민족의식과 당에 대한 지지를 유

19. ‘Unfavorable Views of China Reach Historic Highs in Many Countries’, Pew Research Center Report, 2020.10.06.,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0/10/06/unfavorable-views-of-china-reach-historic-highs-in-many-countries>.

20.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하는 핵심 집단, 누구일까?’, 시사IN, 2021.06.17.,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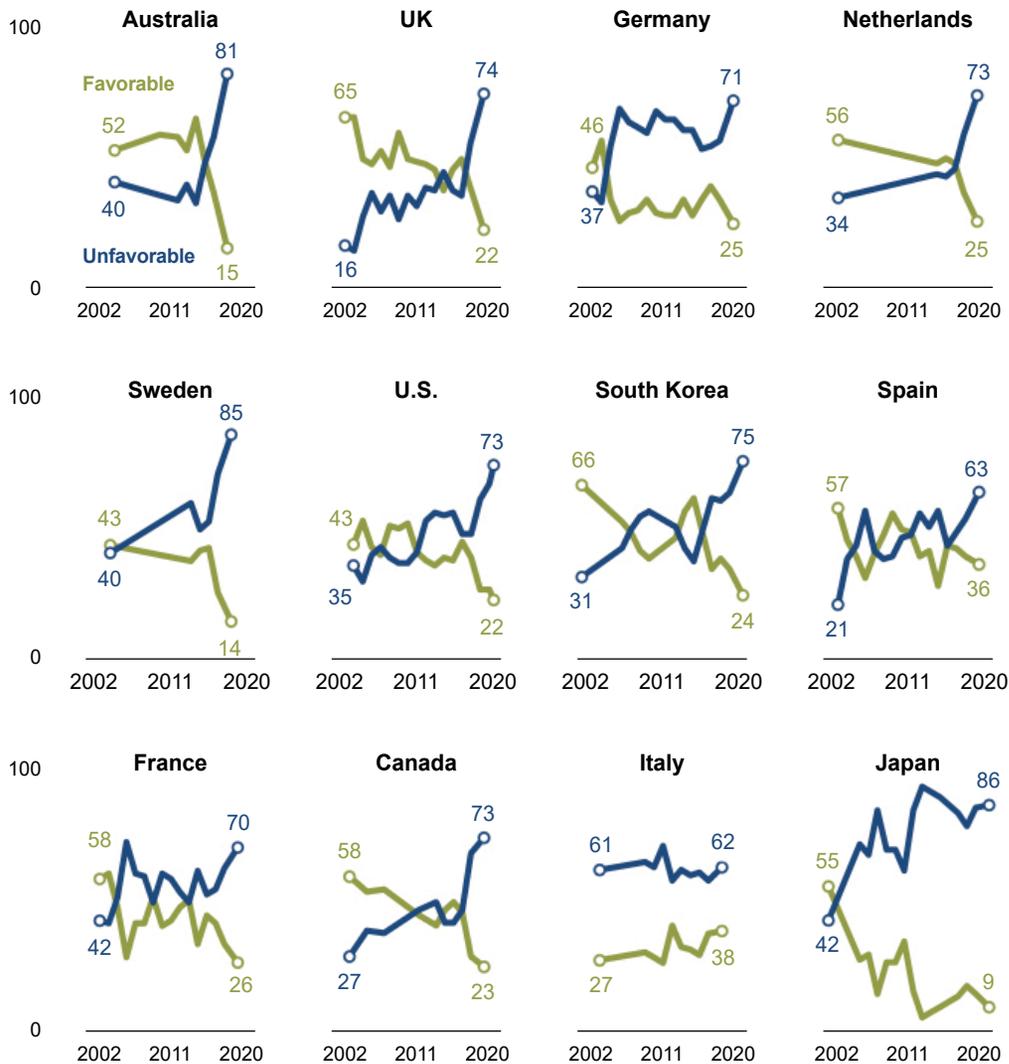
21. 신형국제관계는 현재의 국제질서가 공평하지 않고 미국 등 일부 강대국에게 유리하게 조성됐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여 ‘상호존중’, ‘공평정의’, ‘협력공영’의 원칙 아래에서 다른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개념이다.

22. 인류운명공동체는 시진핑 주석이 2015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특히 2017년 19차 당대회 연설에서 시진핑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할 것을 천명했다.

도해 온 시진핑 정부에게 중국의 국가 이미지 실추와 반중 정서의 확산으로 인한 정치적 타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그림 1] COVID-19 팬데믹 이후의 대중 인식 변화

(%: 중국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



출처: Unfavorable Views of China Reach Historic Highs in Many Countries, Pew Research Center Report, 2020.10.06.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0/10/06/unfavorable-views-of-china-reach-historic-highs-in-many-countries/pg_2020-10-06_global-views-china_0-01/.

3) 국내 코로나 사태의 조기 통제와 COVID-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기회

자오리젠(赵立坚)²³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COVID-19의 미군 유포설을 제기하며 공세적 외교를 펼치기 시작한 시점은 2020년 3월 12일로 중국과 세계의 코로나 상황이 뒤바뀐 시점과 비슷하다. 시진핑 정부가 감염병 대응 실패로 인한 정치안보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 봉쇄, 이동 제한 등 인권 침해의 비난을 받을 만큼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한 결과, 중국 내 코로나 상황은 빠르게 통제되기 시작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후베이성 봉쇄 후 약 1달이 지난 2월 18에는 중국 내 후베이성 외 신규 확진자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졌고,²⁴ 3월 7일에는 후베이성을 포함한 중국 전역의 신규 확진자수가 100명 이하로 집계됐다.²⁵ 이를 기반으로 3월 10일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COVID-19 방역 성공을 선언했다.

반면에 이 시기 미국과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COVID-19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됐다. 2020년 3월 11일 WHO가 COVID-19의 팬데믹을 선언한 데에 이어서 3월 13일 미국 정부도 COVID-19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²⁶ 각국의 COVID-19 상황은 COVID-19에 대한 정보 부족, 각국 정부의 안이한 대응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았지만,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 내에서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하던 중국에서 COVID-19가 발병하고 확산되었기 때문에 각국의 의료물품 공급과 의료체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COVID-19 대응을 비판하던 국가들도 자국 내 COVID-19 사태에 집중하면서 글로벌 리더십의 공백 현상이 나타났다.

23. 자오리젠은 이전부터 공격적인 언사를 보여왔다. 예를 들어 2019년 7월 미국을 비롯한 22개국이 중국의 신장위구르 인권문제를 제기했을 때, 주파키스탄 중국대사관 공사였던 자오리젠은 미국의 인종차별을 공격하는 트윗터를 올리기도 했다. 그해 8월 그는 외교부 대변인으로 승진했다. 자세한 내용은 박민희, “중국의 딜레마”, 한겨레출판, 2021, pp. 57-58 참고.

24. “A Decisive Stage for China’s Fight against COVID-19 Epidemic”, 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 2020.02, p. 2.

25. ‘중국 COVID-19 신규 확진자 100명 아래로 떨어져, 세계는 10만 돌파’, 파이낸셜뉴스, 2020.03.07., <https://www.fnnews.com/news/202003071544467135>.

26. ‘Proclamation on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Concerning the Novel Coronavirus Disease (COVID-19) Outbreak’, The White House, 2020.03.13.,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presidential-actions/proclamation-declaring-national-emergency-concerning-novel-coronavirus-disease-covid-19-outbreak>.

이런 상황은 조기에 국내 방역을 마무리한 중국에게 전화위복의 기회를 제공했다. 우선,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체제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중국의 COVID-19 방역 실패를 체제의 문제로 비난하던 미국 등 서구국가들이 COVID-19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이 조기에 국내 코로나 사태를 통제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중국식 체제가 서구식 체제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다. 비록 그것이 전염병이라는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권위주의 체제의 효율성과 통제력에 국한된 것일지라도 중국 정부는 국내의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선전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의 이미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화는 둔화되고 각국은 국경을 봉쇄하며 각자도생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 교통 및 교역에 기반한 물적 이동이 제한되면서 마스크 등 의료물품이 부족해졌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자국 내 COVID-19 사태에만 집중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은 강력한 생산력과 방역 경험을 토대로 타국과의 방역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주도국으로 역할을 하는 것 외에도 중국 국내에서 자국의 국가 이미지를 미화하고 선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2. 중국의 애국주의 노선

1980년 말부터 진행된 한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 1990년대 냉전의 종식 등과 같은 대외적 변화는 물론, 문화대혁명 이후 발생한 이데올로기의 공백 속에서 개혁개방 이후 유입된 서구 사상의 확산에 직면한 중국공산당은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애국주의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9년 6월에 발생한 톈안문 사건 이후 중국공산당은 정치사상교육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 분야로 인식했고, 서구 사상에 대항하기 위하여 민족주의적 감성에 기초하여 중국 국민들의 통합을 추진하기 시작했다.²⁷ 이것은 1994년 8월 23일 “애국주의 교육 실시 요강(爱国主义教育实施纲要)”으로 이어졌다.

이후 중국 정부는 1998년 “고등교육기관의 ‘량커(两课)’ 수업 개설 규정 및 그 실현 업무에

27. 이동규, ‘중국공산당 이데올로기 전략의 효용성 연구 - 중국의 정치사상교육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68권, 2020.12., pp. 148-150.

대한 의견(关于普通高等学校两课课程设置的规定及其实现工作的意见)”과²⁸ 2005년의 “대학생 사상정치교육 강화 및 개선에 대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和改进大学生思想政治教育的意见)”을 통해서 애국주의에 기반한 정치교육을 강화했다. 즉, 중국의 정치사상교육은 전통적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아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기 시작했다. 중국공산당이 어떻게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의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중국을 서구 열강의 침탈에서 구원하고 부강하게 했는가를 설명하면서 중국공산당의 업적과 중화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진핑 정부 시기 중국공산당의 성과 정당성(performance legitimacy)이²⁹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강화됐다. 시진핑 시기에 들면서 중국 경제는 ‘신창타이’라는 중·고속 성장 단계에 진입했을 뿐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전쟁 속에서 위축됐다. 빈번한 노동자 및 농민들의 반정부 시위, 빈부 격차, 부패문제 등의 사회불평등 문제가 중국 사회를 불안정하게 했다. 또한, 시진핑은 자신의 정치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격대지정(隔代指定)’, ‘칠상팔하(七上八下)’ 같은 집단지도체제의 관행을 따르지 않고 현재 3연임을 추구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의 근거가 됐던 경제성장, 사회안정, 제도화 등의 성과 정당성이 훼손된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공산당의 통치 정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진핑 정부는 반서구적,

28. ‘랑커’는 ‘사상도덕수양’과 ‘법률기초’이라는 두 개의 과목을 의미한다. 이 두 과목은 2005년에 ‘사상도덕수양과 법률기초’라는 필수과목으로 병합됐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정치사상교육은 마르크스이론보다는 중국근현대사 강요, 당대 정세와 정책 등의 수업을 통해서 중국공산당의 통치 업적과 시대인식, 중화민족의 정체성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29.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이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경제성장이나 사회안정과 같은 외적 성과에 있다는 주장이다. Tony Saich, Zhao Dingxin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이 중국공산당 정당성의 유일한 근거라고 주장하였고, Dickson은 2008년 금융위기 시 경제발전과 대중의 지지 간의 역관계를 발견하고 사회 안정을 다른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위기관리 능력, 반부패 운동 등을 통한 윤리적 성과 등이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Tony Saich, “Governance and Politics of China”, London: Palgrave, 2004, p. 347; Zhao Dingxin, ‘The Mandate of Heaven and Performance i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China’,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3:3, 2009, pp. 416-433; Bruce Dickson, ‘Who Wants to be a Communist? Career Incentives and Mobilized Loyalty in China’, “China Quarterly” 217, 2013, pp. 42-68을 참고.

민족주의적인 애국주의 노선을 강화해 왔다. 2018년 전인대 연설에서 시진핑은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중화민족이 극악무도한 침략자(穷凶极恶的侵略者)인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승리했음”을 강조하며,³⁰ 민주, 자유,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중국을 침략했던 서구의 가치로 폄훼하고, 그로 인한 정치변동을 억제하고자 했다. 또한 시진핑은 “경제 건설이 당의 중심 업무이지만, 이데올로기는 더 중요한 당의 중요 업무”임을 지적하고³¹ △고등교육기관 정치사상교육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시진핑 어록 학습운동,³² △SNS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이데올로기 선전 등을 통해서 애국주의를 주입 및 확산하는 이데올로기 전략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시진핑 정부는 중화민족의 미래와 중국공산당의 통치의 일체화를 모색했다. 시진핑은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공산당이 창당된 이후, 중화민족이 민족 독립과 국가 부강을 실현했다”면서 “중국공산당은 중화민족 부흥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왔다”는 것을 강조했다.³³ ‘중국의 꿈, 나의 꿈(中国梦, 我的梦)’이나 ‘중국이 왜 강해졌는가, 공산당 때문이다(中国何以强, 缘有共产党)’와 같은 표어에서 볼 수 있듯이, 시진핑 정부는 중국공산당만이 중국을 강대하게 할 수 있고, 공산당이 아니면 중국은 강대국의 꿈을 이룰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강대한 중국을 원한다면 공산당을 지지하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상술한 대내외적 도전과 기회 속에서 시진핑 정부는 중국공산당 통치체제에 대한 정치적 불만을 빠르게 해소하여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의 응집력과 국민의 단결을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중국 정부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은 애국주의 노선을 통해 국내 민족주의적 감성을 자극하는 일이었다.

30. 人民日报, 2018.03.21., <http://lianghui.people.com.cn/2018npc/n1/2018/0321/c417507-29879341.html>.

31. 习近平, ‘把宣传思想工作做的更好’, 《习近平谈治国理政》, 北京: 外文出版社, 2016, p. 153.

32. 시진핑의 취임 이후 “시진핑 치국이정을 말한다(习近平谈治国理政)”, “시진핑 개혁전면심화를 논하다(习近平关于全面深化改革论述摘编)”, “시진핑 총서기 중요 강화 독본(习近平总书记系列重要讲话读本)” 등의 시진핑 어록이 연달아 출판되고, 학교에서는 시진핑 어록 학습 운동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전 지도자의 어록 문집이 지도자의 퇴임 후에 출판된 점을 볼 때, 시진핑이 집권하는 현재 시진핑 어록이 출판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33. ‘习近平在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人民网, 2017. 10. 28., <http://cpc.people.com.cn/n1/2017/1028/c64094-29613660.html>.

중국의 전랑외교는 2020년 3월 12일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 내 SNS에 제기된 ‘미군 COVID-19 유포설’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³⁴ 이는 미국의 중국 책임론에 대응해 중국 내 SNS에서 확산된 것으로, 2019년 우한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한 미군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중국에 가져왔다는 내용이었다.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COVID-19의 기원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이 COVID-19 극복을 위해서 중국과 협력하기는커녕 ‘우한 폐렴’, ‘중국 폐렴’ 등 중국을 비난하는 상황은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오리젠의 발언은 하나의 탈출구와 같았고 중국인들은 그 내용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외교부의 발언을 환영하고 SNS를 통해 확산시켰다.

이에 따라 중국 외교부 대변인과 외교관들은 트위터 계정을 신설하고 SNS를 중심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화춘잉(华春莹)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조지 플로이드의 마지막 말인 “숨을 쉴 수 없어요(I can't breathe)”를 올리며 미국의 인종차별을 지적했고, 루샤예(卢沙野) 주프랑스 중국대사는 “왜 트럼프는 도망가는가(Why Trump fled?)”라는 제목의 만화나 당나귀와 코끼리가 싸우는 그림을 트위터에 올려 트럼프 행정부의 COVID-19 대응을 조롱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중국 외교부의 공세적 언사와 중국 정부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은 다른 국가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중국은 전랑외교를 중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직면한 공격과 매도에 대해서 진상을 설명하는 것을 전랑외교라고 한다면,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 국가의 명예와 존엄, 그리고 국제의 공평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전랑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³⁵

34. ‘中 외교부 대변인 “미군이 우한에 코로나 전염시켰을 수 있다”’, 중앙일보, 2020.03.13., <https://news.joins.com/article/23729349>.

35. 2020년12월10일外交部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中国外交部, 2020.12.10., https://www.fmprc.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t1839233.shtml.

Ⅲ. 전랑외교의 의도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전랑외교를 통해서 추구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이번 장에서는 지난 근 2년간 전랑외교가 보여준 내용과 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전랑외교를 시행하는 중국 정부의 의도와 그 함축성을 생각해 본다.

1. COVID-19 책임론 회피

일반적으로 전랑외교가 시작된 시기를 2020년 3월 12일, 즉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이 미군의 COVID-19 전파설을 트위터에 올린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때는 중국에서 발생한 COVID-19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시기였다. 게다가 미국 내 일부 언론이 우한연구소가 실제로 생물학무기 연구소이며, 생물학무기 개발과정에서 COVID-19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때이기도 했다.

물론, COVID-19의 기원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1년 초 중국 현지조사를 진행했던 WHO 전문가들은 COVID-19의 실험실 유출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중국 후베이성에서 COVID-19의 기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³⁶ 그러나 미국 정부는 중국이 WHO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제2차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 역시 중국의 데이터와 투명성 부족으로 조사 활동이 방해받았다는 점을 언급했다.³⁷ 이에 반해서 중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정치적 의도로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으며, 추가 조사에도 반대하고 있다.

COVID-19의 기원이나 발병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자국에 대한 방어에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수동적인 방어에 그치지 않고,

36. “코로나 중국책임론에 면죄부?...‘WHO 조사’ 미중 공방 가열”, 연합뉴스, 2021.02.10.,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0051300083>.

37. “COVID-19: WHO 새 조사팀 출범...‘바이러스 기원 찾는 마지막 기회’”, BBC, 2021.10.14.,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8907297>.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COVID-19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자오리젠이 미군 유포설을 제기한 것 외에도, 중국이 인민일보, 환구시보 등 관영매체를 통해서 배포한 “미국이 세계에 진실을 알려야 하는 10 개의 문제(这 10 个问题, 美国必须给全世界一个真相; 10 Questions the US Needs to Offer Clear Answers to the World)”는 2019년 미국 독감환자 중에 COVID-19 환자의 수가 얼마인가, 생물학무기연구소인 포트 데트릭(Fort Detrick)이 왜 2019년 7월에 폐쇄되었는가 등의 의문을 제기하며 COVID-19가 미국에서 시작됐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³⁸ 중국 현지 조사를 둘러싼 논쟁이 격해지는 최근에도 자오리젠은 미군 유포설을 다시 제기하면서 기자회견에서 포트 데트릭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소를 조사해야 한다고 WHO에 요구했다.³⁹

이러한 음모론 제기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11월에는 인도 주재 중국 영사가 미국 메인 주에서 수입한 냉동 랍스터에 COVID-19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주장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메시지가 550개 이상의 트위터 계정에서 중국 표준시간으로 매일 오전 8~11시 사이에 영어, 스페인어, 불어, 폴란드어, 한국어, 라틴어로 번역되어 업로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⁴⁰

미국의 COVID-19의 중국 유출설을 정치적 의도에 의한 음해라고 비난하면서도 중국 역시 COVID-19에 대한 다양한 음모설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은 아이러니하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런 행보를 보이는가?

첫째, 중국의 일차적인 목적은 COVID-19 발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COVID-19가 미국의 주장대로 중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그 기원이 어찌 됐든 간에 중국의 대응 실패로 전 세계가 COVID-19로 인한 막대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중국은 COVID-19가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미 발병했음을 주장함으로써 자국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38. “这 10 个问题, 美国必须给全世界一个真相!”, 人民网, 2020.05.01., <http://m.people.cn/n4/2020/0516/c57-13955551.html>.

39. “중 ‘COVID-19는 미국에서 퍼트려’ 선전 강화”, 2021.08.07., <https://www.fnnews.com/news/202108070809124533>.

40. ‘중외교관 “미국산 랍스터가 코로나 원인” 트윗…음모론 확산’, 동아일보, 2021.10.22.,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1022/109842699/1>.

둘째, COVID-19로 형성된 국내 불만을 완화하려는 의도이다. 중국은 70%가 넘는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⁴¹ 여전히 중국 입국자에 대한 3주간의 시설 격리, 도시 봉쇄, 이동 제한 등 강력한 방역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역체제는 코로나 방역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COVID-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맞물려 COVID-19 초기 대응에 실패한 시진핑 정부에 대한 책임론으로 발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COVID-19 사태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 정부는 COVID-19의 발병과 확산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며 국내 불만을 해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내에서 미국 음모론이 다시 불거졌던 지난 9월은 COVID-19 델타 변이가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이때 환구시보는 미국 포트 데트릭 연구소 조사에 대한 청원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고, CCTV는 ‘포트 데트릭의 어두운 이야기’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을 편성하기도 했다.⁴² COVID-19 발생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게 전가함으로써 COVID-19 확산으로 인한 국내 불안과 불만을 완화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2. 중국 체제의 우월성 과시

2020년 5월 13일 루샤예 주프랑스 중국대사는 대사관의 공식 트위터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정당정치를 풍자하는 그림을 올렸다. 시기적으로 보면, 5.4운동 기념일에 매튜 포틴저가 중국 정부의 언론통제 및 반체제 인사 탄압을 비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어서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 역시 2020년 5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I can’t breathe”라는 문장을 올리며 간접적으로 미국의 인종차별과 미국의 정치체제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외교관들의 언행은 COVID-19 대응에 효과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식 민주체제를 비난함으로써 코로나 방역을 완수한 중국 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41. ‘China Has Fully Vaccinated More Than 1 Billion People’, *Bloomberg*, 2021.09.16.,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9-16/china-has-fully-vaccinated-more-than-1-billion-people?sref=pfyOJ3jG>.

42. ‘중 “COVID-19는 미국에서 퍼트려” 선전 강화’, 2021.08.07., <https://www.fnnews.com/news/202108070809124533>.

COVID-19 사태가 불투명한 중국식 체제 때문에 확산된 것이라면서 중국공산당 통치체제를 비난하며 미중 간 전략경쟁을 체제 경쟁으로까지 확대했다. 이러한 체제 공격은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에 대한 중국 내 불만과 연결되어 시진핑 및 중국공산당의 권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런 시점에서 조기에 통제된 중국의 코로나 상황과 통제 불능 상태로 나아가는 미국 등 서구국가들의 코로나 상황은 중국식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국내의 정치 불만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서구의 시각에서 이런 중국의 방식은 감염병 등 위기 사태에서 강력한 사회통제가 가능한 권위주의 국가가 유리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할지라도, 대내적으로 중국공산당의 방역 성과를 기반으로 중국공산당 통치체제가 국민의 생명과 이익을 수호하는 데에 유리함을 홍보하고 국내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이후 중국의 전랑외교는 방역 성과를 비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 등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 비난과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 3월 중국 국무원은 ‘2020년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2020年美国侵犯人权报告)’를 발간하며, 미국 내 인종차별 문제나 방역 실패뿐 아니라, 미국식 민주질서가 정치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했다.⁴³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2021년 양회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민주와 인권을 빙자해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함으로써 세계에 혼란과 전쟁의 불씨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⁴⁴ 3월에 개최된 앵커리지 회담에서도 양제츠(杨洁篪)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블링컨(Antony J. Blinken) 국무장관의 신장위구르, 홍콩, 대만 문제 제기에 대해서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민주주의 주입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서구식 민주질서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비난은 각 국가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노선을 모색하던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이전에 서구와 중국을 차별하며 중국식 민주와 자유를 강조해 왔지만, 그것은 다양성에 기초한 소극적인 대응이었다. 즉, 서구식 가치 확산에 의한 정치변동을 경계하며 중국식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COVID-19 팬데믹 이후 미국과의 경

43. “2020年美国侵犯人权报告”, 中国国务院, 2020.03.

44. ‘国务委员兼外交部长王毅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回答中外记者提问’, https://www.fmprc.gov.cn/web/wjzb_673089/zyjh_673099/t1859110.shtml.

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노골적으로 서구식 민주를 공격하고, 중국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과 공격은 미국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지만, 중국인으로 하여금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했다. 앵커리지 회담에서 양제츠의 공격적 발언에 대해서 중국의 SNS 웨이보에는 “그 어떤 국가가 미국을 자국 영토에서 이렇게 코너에 몰 수 있을 것인가?”라는 코멘트가 등장하는 등 국내 여론은 중국의 공세적 외교를 세계 패권국인 미국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하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⁴⁵ 19세기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백년의 수치’ 역사를 경험한 중국인들, 그리고 애국주의 교육을 통해 민족적 자부심이 높은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대한 서구 열강들의 개입과 견제는 부당한 것이었다. 2000년 올림픽 개최 실패, 2008년 올림픽 성화 봉송 사건, 2012년 센카쿠/다위다오 상륙 사건 등이 중국 국내에서 대규모 시위를 야기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서구 체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직접적 공격과 비난은 중국공산당이 강조해 왔던 강한 중국이 실현되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되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지와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

3. ‘책임 있는 대국’ 이미지 구축

상술했듯이, COVID-19가 중국 내에서 발병했고, 중국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로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COVID-19를 ‘우한 바이러스’, ‘우한 폐렴’, ‘중국 폐렴’ 등으로 부르는 등 중국의 국가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됐다. 그러나 각국 의료체계의 붕괴와 의료물품의 부족, 전염병에 대한 국제협력의 부재, 선진국들의 자국 중심주의 등 COVID-19 팬데믹으로 발생한 국제사회의 혼란은 국내 코로나 상황을 통제할 중국 정부에게 하나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소위 ‘마스크외교(mask diplomacy)’와 ‘백신외교(vaccine diplomacy)’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국의 이러한 노력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다.

2020년 3월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인류운명공동체’의 이념에 따라 중국 정부

45. Lara Jakes and Steven Lee Myers, ‘Tense Talks with China Left US ‘Cleareyed’ About Beijing’s Intentions, Officials Say’, *New York Times*, 2021.03.19.

는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국가들을 힘이 닿는 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⁴⁶ 2020년 5월 18일에 개최된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연설에서는 ‘인류보건건강공동체(人类卫生健康共同体)’를 제시하며 각국이 글로벌 방역협력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⁷ 또한, 시진핑은 2021년 5월 G20 글로벌 보건정상회의에서도 COVID-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면제와 COVID-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백신협력국제포럼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막대한 의료물품, 방역 경험과 방역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각국과의 방역 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먼저 COVID-19 팬데믹 이후 글로벌밸류체인인 손상으로 의료물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의료체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중국은 자국의 생산력과 방역 경험을 기반으로 ‘마스크 외교’를 추진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전 세계적으로 의료물품의 부족 사태가 나타나던 시기에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방역물품과 진단키트 등을 수출 및 지원했다.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중국은 27개국에 의료진을 파견하고, 150개 국가와 4개의 국제기구에 방역물품을 지원했다.⁴⁸

또한, 중국은 백신 민족주의가 우세한 상황 속에서 자국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백신외교’를 추진했다. 미국이 WHO의 편향성을 비난하며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 가입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으로⁴⁹ 중국은 개도국을 우선으로 백신을 글로벌 공공재로 제공할 것임을 밝히며 2020년 10월 코백스 퍼실리티에 참여했다. 2021년 5월 8일과 6월 2일에 시노팜과 시노백이 각각 WHO의 긴급승인을 받고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백신외교는 더욱 빠르게 확산됐다.

46. ‘习近平在二十国集团领导人特别峰会上的重要讲话(全文)’, 新华社, 2020.03.26., http://www.gov.cn/xinwen/2020-03/26/content_5496106.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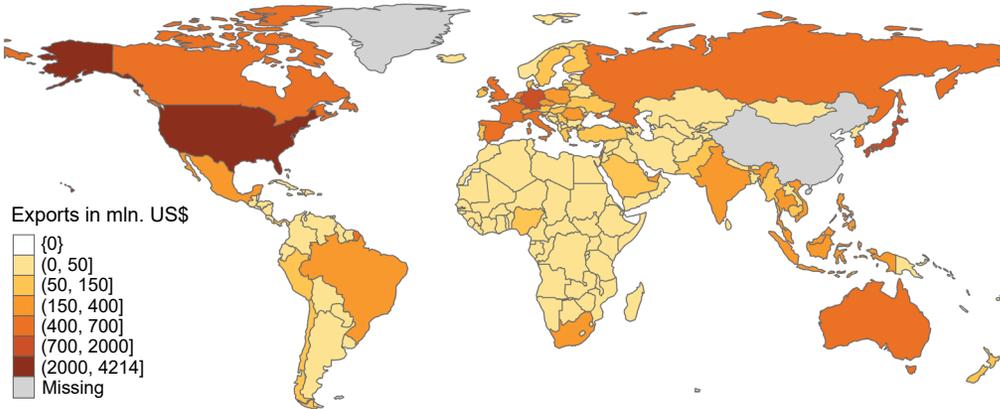
47. ‘习近平在第73届世界卫生大会视频会议开幕式上致辞’, 人民网, 2020.05.19., <http://ln.people.com.cn/n2/2020/0519/c378333-34027265.html>.

48. 중국이 일대일로 연선국가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방역지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국은 방역협력을 기반으로 일대일로의 추진력 확보 및 해당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제고 등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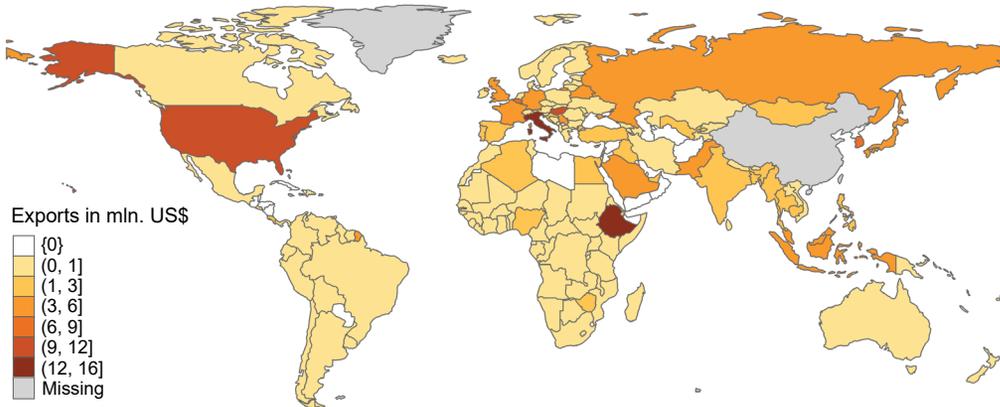
49. 미국은 2021년 1월에 코백스 퍼실리티에 참여했다.

[그림 2] 2020년 3~4월 중국의 의료물품 지원 현황

1) 의료용품 수출 지역



2) 의료용품 기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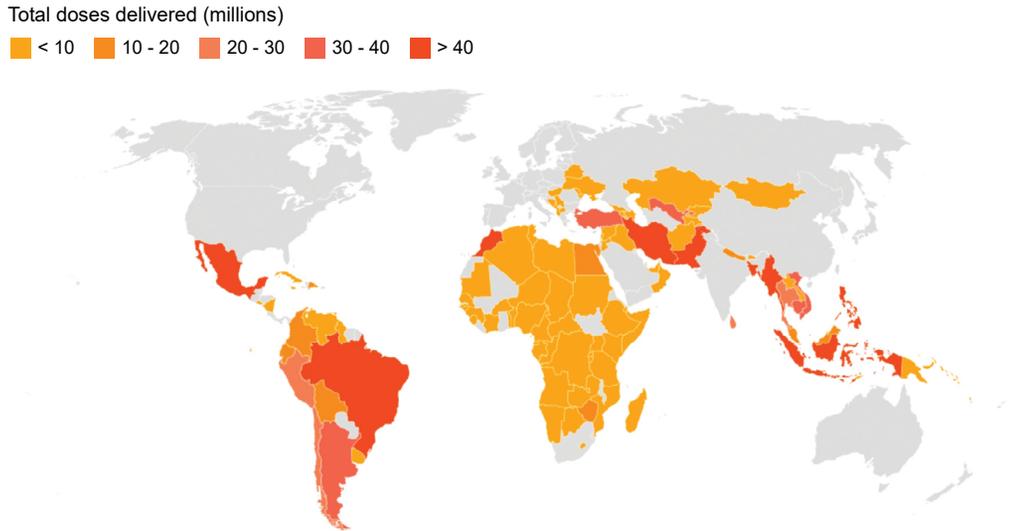


출처: 'China's mask diplomacy: political and business ties facilitate access to critical medical goods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VoxEU, 2020.09.16., <https://voxeu.org/article/china-s-mask-diplomacy>.

그런데 중국의 백신 지원에 대한 일부 연구는 이러한 중국의 방역지원이 선전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산 백신의 유통에 대한 브리지베이징 (bridgebeijing)의 연구에 의하면, 2021년 10월 25일 기준 중국 백신의 판매량은 13억 도스, 기부량은 8700만 도스, 코백스를 통한 전달은 10억 도스로 기부량보다 판매량이 1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⁰ 그리고 [그림 3]과 같이 중국산 백신이 유통된 국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미국 혹은 유럽산 백신을 구매할 여력이 없거나 의료체제의 발전도가 미흡한 국가들이다.

[그림 3] 중국의 백신 공급 현황



출처: <https://bridgebeijing.com/our-publications/our-publications-1/china-covid-19-vaccines-tracker/>.

비록 중국의 마스크외교와 백신외교가 COVID-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중국 정부는 백신 계약을 맺은 개도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중국산 백신을 접종하는 사진 혹은 중국의 지원에 감사하는 내용을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서 홍보해 왔다. 외교부 역시 중국산 백신에 대한 WHO의 긴급승인과 관련해 중국이 80여 개국에 백신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40여 개국에 백신을 수출하면서 국제사회에 3억5천만 회분 이상의 COVID-19 백신을 제공했음을 강조했다.⁵¹ 중국 정부가 마스크외교와 백신외교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선전하는 것은 중국을 COVID-19 발병국이 아니라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는 ‘책임 있는 대국’의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50. ‘China COVID-19 Vaccine Tracker’, <https://bridgebeijing.com/our-publications/our-publications-1/china-covid-19-vaccines-tracker>.

51. 2021년6월2일외교부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中国外交部, 2021.06.02., https://www.fmprc.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t1839233.shtml.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 방역 홍보와 선전은 대내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카터센터(Carter Center)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국인들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 78%(매우 좋다 46%, 좋다 32%)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했다.⁵²

4. 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 약화

2020년 11월 3일 자오리젠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호주 군인이 아프가니스탄 어린이의 목에 단검을 대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 사진은 합성사진으로 밝혀졌고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가 직접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표 2] 중국의 대호주 경제 제재

품목	제재 내용
소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5월 11일 호주 육류가공업체 4곳의 위생증명서와 라벨 표시를 지적하며 해당 업체의 소고기 수입 중단함. - 그 결과 2020년 5~10월 호주 소고기의 대중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37.6%가 감소한 약 8억 8,300만 호주달러로 집계됨.
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5월 19일 중국 상무부가 호주의 보리 덩핑을 지적하며 호주산 보리에 반덤핑 73.6%, 반보조금 6.9%, 총 80.5%의 관세를 부과함. - 9월 중국 해관총서는 호주산 보리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호주산 보리 반입 일시 중단함. - 2020년 5~10월 호주산 보리의 대중 수출액은 약 1억 3,800만 호주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 감소함.
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8월 중국은 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및 정부 보조금 조사를 시작함. - 11월 27일 중국은 호주산 와인에 반덤핑 관세(107.1~212.1%)를 부과함. - 12월 10일 임시 상계관세(6.3~6.4%)를 추가 부과함.
석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0월 중국 정부가 호주산 석탄의 하역을 금지시키고, 국유발전기업과 제철소에 호주산 석탄 수입의 중단을 통보함. - 12월 14일 석탄 수입 통관 절차 면제에서 호주산 석탄이 제외됨. - 결국 중국 내 석탄 부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 발전소 운영 중단, 대규모 전력난이 발생함.

출처: 언론보도를 기반으로 필자가 작성.

52. '중국인 10명 중 8명 '국제사회에서 중국 이미지 좋다'', 한국경제, 2021.11.08., <https://news.v.daum.net/v/20211108102211284>.

호주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공세는 레토릭에 그치지 않았다. 2020년 4월 모리슨 호주 총리가 미국 및 유럽 국가와 함께 COVID-19 발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지지하면서 중국은 호주에 대한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 2020년 4월 26일 청징예(成竞业) 주호주 중국대사가 △관광, △중국 유학생의 호주 유학, △호주산 와인과 소고기에 대한 경제 보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이후, 중국은 소고기, 보리, 와인, 랍스터, 설탕, 면화, 목재, 석탄, 구리 등 다양한 항목의 원자재와 농식품 수입을 제한한 것이다.

중국은 신장위구르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유럽연합(EU)에 대해서 상응조치를 취하며 압박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22일, EU, 미국, 캐나다, 영국이 신장 지역 내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후 EU는 EU 세계인권제재 체제(The EU 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에 근거하여 신장위구르 자치구 지역의 정치, 경제에 관여하는 중국인 관료 4명, 기관 1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이에 반해 2021년 3월 22일, 중국은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거짓과 허위 정보에 기초한 EU의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히며, EU 관련 인사 10명과 기관 4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EU가 체결한 EU-중국 포괄적 투자협정(EU-China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CAI)의 비준 여부는 불투명해지고, 인권 문제를 둘러싼 EU와 중국의 갈등이 심화됐다.

[표 3] 중국과 EU의 신장위구르 문제 관련 제재 대상 비교

중국의 제재 대상	미국, EU의 제재 대상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의원 5명	△왕친정(王君正) 신장생산건설병단 당위원회 서기
△네덜란드·벨기에·리투아니아 의회 의원 3명	△천명귀(陳明國) 신장공안국장
△독일·스웨덴 학자 2명	△주하이룬(朱海倫) 전 신장당위원회 부서기
△EU 이사회 정치안전위원회	△왕밍산(王明山) 신장정치법률위원회 서기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	△신장생산건설병단 공안국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학연구소(MERICS)	
△덴마크 Alliance of Democracies Foundation	

출처: 필자 정리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책을 계승하면서도 동맹외교와 가치외교를 내세우며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반중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호

주나 EU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발언과 경제적, 외교적 제재 조치는 미국의 동맹이나 협력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중 연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이 외교적 언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 실행 행사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국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갈등 사안에 대한 보복 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한다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관련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중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5. 소결: 전랑외교의 함축성

COVID-19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중국 정부는 중국공산당 체제에 대한 국내 불만과 미국 등 서구국가들의 체제 공격에 직면했다. 그러나 COVID-19로 인한 혼란과 장기화된 팬데믹 속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의 방역 협력과 지원, 그리고 기타 국가들의 COVID-19 대응 실패를 기회로 삼아 전랑외교를 펼쳐왔다. 상술한 전랑외교의 내용과 의도를 고려할 때, 중국의 전랑외교는 다음과 같은 함축성을 가지고 있다.

1) 국내정치적 불안정 해소

미군의 COVID-19 유포설이나 포트 데트릭 연구소 유출설과 같은 음모론, 그리고 서구식 민주체제에 대한 공격과 조롱, 마스크외교 및 백신외교를 통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 홍보, 신장위구르 문제 등 중국의 핵심이익 침해에 대한 강경한 대응 등 중국의 전랑외교로 인해서 중국의 대외관계가 위축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여전히 이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국내정치적 필요성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 중국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중국공산당 체제에 대한 국내 불만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장에서 보았듯이 중국 내 COVID-19 발병으로 중국 내에서는 시진핑 및 공산당 통치체제에 대한 불만이 확산됐다. 이미 구소련 및 동구권의 몰락을 목도한 중국은 정치변동 가능성을 경계하며 억제해 왔다. 그런 점에서 COVID-19 이후 확산된 당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정치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였다. 중국이 사이버공간을 통제함에 따라 그러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지 않지만, 리원량의 사망 이후에는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서(online petition)’의 등장이나, 중국의 방역성과 홍보나 방역 영웅 선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표출되는 것을 볼 때 여전히 중국 사회 내에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³ 이러한 불만과 불신이 실제로 표출된다면 그것은 제2의 톈안문 사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식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 체제가 서구 체제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불만의 표출과 그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강한 중국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당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 중국의 전랑외교는 외부의 시각에서는 마치 강패(bully)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중국의 시각에서는 당당하게 중국과 중국인의 이익을 수호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창당 후 지난 100년 동안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 투쟁해왔고 앞으로도 투쟁할 것을 시사하면서 당당한 중국, 강한 중국을 원한다면 중국공산당을 신뢰해야 한다는 애국주의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셋째, SNS 등 사이버공간을 포함해 중국 사회에서 당에 대한 불만 표출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전랑외교의 행보와 성과가 중국 국내에서 언론 및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것을 고려할 때, 그 대상은 중국 국내의 애국주의자들, 특히 MZ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MZ세대는 어릴 적부터 애국주의 교육을 받았고, 개혁개방 이후 부상한 중국의 모습을 보고 그 성과를 누려온 세대들이다. 중국 내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홍색 관광 열풍이 불 정도로 중국과 중국공산당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상당하다.⁵⁴

그러나 COVID-19의 발병과 확산으로 반중 정서가 국제사회에 확산됐다. 많은 국가가 방역을 위해서 중국인을 입국금지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사건도 심심찮게 일어났다. 이런 모습은 애국주의 교육을 받은 중국인들에게 서구 열강의 침

53. ‘Coronavirus: Li Wenliang’s death prompts academics to challenge Beijing on freedom of speech’, *South China Morning Post*, 2020.02.12., <https://www.scmp.com/news/china/politics/article/3050086/coronavirushundreds-chinese-sign-petition-calling-freedom>; ‘China’s Virus Censorship and Propaganda Draw Backlash’, *Wall Street Journal*, 2020.02.25., <https://www.wsj.com/articles/chinas-virus-censorshipand-propaganda-draw-backlash-11582632006>을 참조.

54. ‘중국 ‘홍색관광’ 젊은 세대에서 인기...“다양한 체험으로 활기”’, *한국경제*, 2018.07.30.,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807303546Y>.

락과 수탈로 얼룩진 ‘백 년의 수치’ 역사를 상기시켰을 것이다. 즉,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발전을 일체화하는 교육을 받은 그들의 입장에서 COVID-19 책임론이나 체제 공격은 중국공산당이 아니라 중국과 중화민족에 대한 공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전랑외교는 중국과 중화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당당하게 투쟁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 아 이러니하게도 대외적으로 반발을 야기할수록, 강한 중국의 모습을 통해서 국내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중국의 전랑외교에 환호하고 자오리젠 등의 강경한 발언은 물론, 우허치린(烏合麒麟), 반통라오아탕(半桶老阿湯) 등 전랑화가(战狼画家)의 그림을 자발적으로 SNS에서 확산시키고 있다. 이는 민족주의적 감성과 당에 대한 지지가 중국 사회 전체의 여론으로 호도되고, 중국 사회 내 불만의 표출을 가로막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2) 중화질서의 재건 모색

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미국과의 체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은 홍콩, 대만, 신장위구르 문제 등 자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및 EU, 캐나다 등이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 침해에 관여한 인사 및 기관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대응조치를 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홍콩 문제에 대해서도 △2020년 7월 홍콩보안법 제정, △2021년 홍콩특별구선거제도 개정을 통한 애국자치항(爱国者治港) 추진, △빈과일보 폐간 및 홍콩 내 민주화 세력 탄압 등을 통해서 중국은 홍콩 반환 이후 50년간 보장하기로 했던 항인치항(港人治港) 원칙을 파기하고 홍콩에 대한 직접적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가 서구국가들과의 반목을 확대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핵심이익 수호를 명목으로 홍콩, 대만, 신장지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COVID-19 기원에 대한 현지조사 요구에 동참한 호주에 대해서 자국의 경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강력한 경제 보복을 추진했다. COVID-19 기원 조사가 COVID-19에 대한 정확한 정보 획득과 팬데믹 극복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것이 중국 책임론을 확대하고 국내정치적 불만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호히 반대할 뿐 아니라, 호주에 대한 경제 보복을 감행한 것이다.

[표 4] 중국의 경제 보복 사례

대상국가	연도	제재 사유	주요 제재 수단
노르웨이	2010	중국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에 대한 노벨평화상 수여	FTA 추진 연기 연어 수입 금지
일본	2010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인근에서 중국인 어선 선장 체포 및 구류	희토류 수출 중단
필리핀	2012	남중국해 내 군사 대치	과일 수입 제한 관광 제한
한국	2016	사드 배치	수입 규제 관광 제한 중국 진출 기업 조사
캐나다	2018	명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	농식품 수입 제한
호주	2020	COVID-19 기원 조사 요구	원자재, 농식품 수입 제한

출처: 필자 정리.

이는 중국의 핵심이익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상황⁵⁵ 속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각종 사안에 대해 상대국가에 외교적, 경제적 보복을 강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은 이전에도 자국의 경제력을 이용해 갈등 관련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2016년 한중 간의 사드 사태 속에서 중국의 대한국 경제 제재가 한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이를 통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줬고, 한국 내에서는 중국 정부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면서도 경제 협력을 위해서 중국을 의식하는 여론 또한 조성됐다.

현재 시진핑 정부는 ‘책임 있는 대국’, ‘신형국제관계’, ‘인류운명공동체’ 등을 내세우며 중

55. 2011년 9월에 발간된 “중국의 평화발전 백서(中国的和平发展白皮书)”는 중국의 핵심이익을 ‘국가주권(国家主权)’, ‘국가안보(国家安全)’, ‘영토완정(领土完整)’, ‘국가통일(国家统一)’, ‘중국 헌법이 확립한 국가 정치체도와 사회의 안정(中国宪法确立的国家政治制度和社会大局稳定)’,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보장(经济社会可持续发展的基本保障)’으로 밝히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이를 국가주권, 국가안보, 발전이익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국식 세계질서를 구축해 나갈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비록 이상적인 담론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내용이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중국식 세계질서가 어떤 형태로 구현되고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동맹 체제를 냉전의 유산으로 치부하고 타국과의 동반자관계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중국 중심주의적 질서가 아닌가 혹은 중국 중심의 중화질서의 재건과 확대를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핵심이익과 관련해 대립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외교적 공세는 물론, 자국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경제 제재를 취하는 모습은 중국이 추구하는 세계질서가 중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기반으로 인류의 공동번영과 평화발전을 추구하는 구조라기보다는 중국 중심의 질서임을 암시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서구국가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홍콩, 대만, 신장위구르 문제는 물론, 체제와 가치 경쟁은 서구의 시각에서는 민주, 자유,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침해 사례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화질서의 재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IV. 향후 전망

비록 전랑외교가 국제사회에서 중국외교의 활동 공간을 제한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분쟁을 야기하고 있지만, 전랑외교 시행에는 국내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전랑외교를 지속할 뿐 아니라 더욱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1. 전랑외교의 지속: 국내정치의 안정화 필요성

현재 2022년 제20차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의 3연임이 공식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 내에서 암묵적으로 이어지던 격대지정, 칠상팔하 등으로 대표되는 세대교체와 집단지도체제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개헌을 통해서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이 폐지됐고 제19차 당대회에서 차기 후계자가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후계자 지정에 대한 주장이 계속 제기될 정도로, 시진핑의 3연임은 중국공산당 내부에서도 논쟁의 대상이었다.⁵⁶

2020년 초기 중국 내 COVID-19의 발병 및 중국의 초기 대응의 실패를 계기로 중국 내에서는 시진핑 및 공산당 통치체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지고 시진핑과 리커창(李克強) 총리와의 갈등이 부각되면서 시진핑의 장기집권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COVID-19 방역 성과는 물론, 탈빈곤과 전면적 샤오캉사회 실현 등의 업적을 기반으로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시사하는 여러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올해 1월 국방법 개정을 통해서 시진핑이 주석으로 있는 중앙군사위원회가 군사정책 제정권과 결정권을 독점하게 됐다. 이와 관련한 국무원의 권한이 배제되고 시진핑이 국가 방위에 필요한 물자 동원 및 전쟁 개시에 관한 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또한, 2021년 양회에서는 시진핑의 중요 발언과 정책이 반영된 14.5 규획과 2035년 장기발전 목표가 공식화되면서 시진핑이 지속적으로 중국의 장기적 발전 정책과 목표를 주도해 나갈 것을 시사했다. 그리고 당 총서기의 권한을 확대한 2020년 중공중앙공작조례에 이어서 2021년 6월 2일에 발

56. 예를 들어, 2019년 10월 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임위원의 수를 9명으로 확대하고 시진핑의 측근인 천민얼 총징시 당서기와 후춘화 부총리가 상임위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시진핑 후계자 조만간 등장' 소문...천민얼·후춘화 상무위원 발탁설, 국민일보, 2019.10.2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851641&code=611311111&cp=nv>.

표된 중국공산당조직공작조례(中国共产党组织工作条例)는 시진핑 총서기에 대한 모든 당 조직과 당원의 견지를 명시하며 시진핑 개인에 대한 당내 결속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19기 6중전회에 통과된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의(中共中央关于党的百年奋斗重大成就和历史经验的决议)’는 시진핑의 3연임에 대한 공감대가 중국공산당 내부에 이미 형성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비록 중국공산당 내부에서 시진핑 3연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3연임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시진핑은 이러한 움직임이 자신의 권력욕에 의한 독재정치로의 회귀가 아니라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드러내며 국내 지지층들의 결집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국내정치의 안정화를 위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시진핑 정부는 더욱 핵심이익의 수호와 중화민족의 부흥을 강조하며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고취시키려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이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전랑외교를 지속 및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전랑외교의 확대: 경제 제재와 군사 압박

COVID-19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해 시작된 전랑외교는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반중 연대가 가시화되면서 서구식 민주에 대한 비난과 조롱, 미국 동맹 및 협력국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공세로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국내정치의 안정을 위해서 전랑외교를 지속 및 강화해 나간다면, 대만, 홍콩, 신장위구르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핵심이익과 연결된 사안에서 외교 분쟁은 물론이고 군사 압박까지 감수하면서 더욱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최근 격화되고 있는 신장위구르 인권문제와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전랑외교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신장위구르 인권문제를 둘러싼 외교분쟁 격화

2018년 8월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서 맥두갈(Gay McDougall) 위원이 백만 명이 넘는 위구르인들이 강제수용소에 불법 구금돼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신장위구르 인권문제가 대두됐다. 2018년의 CERD의 최종보고서는 중국이 테러 방지의 명목으로 다수의 이슬람교도를 ‘정치적 재교육수용소(political re-education camps)’에 구금하고 있고, 그 수가 백만 명에 달하고 있음을 명시했다.⁵⁷ 이후 언론을 통

해서 불법 구금, 세뇌, 성폭력, 강제 불입 등 신장 수용소 내 인권유린 사례가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중국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관련시설이 수용소가 아닌 재교육센터이며, 서구국가들의 대테러 대응책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캐나다, EU 등은 동 문제를 둘러싸고 관련 인사와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신장위구르 인권문제를 계기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전후로 신장위구르 인권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중국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신장위구르자치구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동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외교적 공세뿐 아니라, 경제적 제재 및 보복 조치를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대내적으로는 2000년 올림픽 개최 실패, 2008년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사건 등의 사건을 부각하며 서구국가들의 인권문제 제기를 서구국가들의 대중 견제와 압박 수단으로 폄하하고 관련국의 인권 실태에 대한 외교적 공세 혹은 경제 보복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국민들의 단결과 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려 할 것이다.

2) 대만에 대한 군사 분쟁 유발 가능성

시진핑 시기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군몽(强军梦)을 추구해 왔다. 2019년 “신시대 중국의 국방정책(新時代的中國國防政策)”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된 중국의 국방백서는 2049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를 양성할 것을 명시하면서 세계 평화 외에도 △중국공산당 영도 및 사회주의 체제 지지, △국가 주권, 해양 권익, 중대 안전영역의 이익, 해외 국가이익 등의 수호를 인민해방군의 사명으로 밝히고 있다. 중국의 군사현대화는 정치지도부의 야망과 맞물려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만 민진당 정부의 대만 독립노선 강화 및 미국의 대만 지원을 계기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정치의 안정화가 필요한 중국 내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은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거나 높이면서 이를 대내적인 정치선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57.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ourteenth to seventeenth periodic reports of China (including Hong Kong, China and Macao, China)’, UN CERD Report, 2018.08.30.

현재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외교적 공세, 경제적 압박,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도발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만약 대만의 독립노선과 미국의 대만 지원으로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지위가 향상되고 대만이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받는 징후가 나타난다면, 중국은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대만 주변 해협으로 동풍(东风)-15, 동풍-26 등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진먼다오(金門島) 등 대만 주변섬을 점령함으로써 대만해협에서의 군사 분쟁을 계획적으로 일으킬 수도 있다.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요구하는 주장이 중국 내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군사 분쟁은 국민들의 결집 및 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전랑외교가 군사적 압박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V. 나가며: 전랑외교와 한중관계

중국의 초기 대응 실패로 COVID-19가 중국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중국공산당 정치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정치안보 위협에 직면해야 했다. 또한 팬데믹 이후 확산된 중국 책임론과 체제 공격, 그리고 반중 정서는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책임 있는 대국을 추구하던 시진핑의 정치적 권위에도 타격을 줬다. 시진핑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적 도전을 극복하고 중국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 내 민족주의 정서와 COVID-19 방역 성과를 기반으로 더욱 공세적인 외교 노선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전랑외교라는 오명을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전랑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국내정치적 이유가 가장 크다. COVID-19 미군 유포설과 같은 음모론을 조직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중국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방역 성과를 중국공산당 통치의 정당성 근거로 활용하는 중국 내 상황을 고려할 때, COVID-19의 발병과 확산의 책임을 미국에게 전가하여 중국공산당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서구식 민주체제와 방역능력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통해서 중국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함으로써 미국과의 체제 경쟁이 야기할 수 있는 국내정치적 불안을 예방하고 중국공산당 통치체제를 더욱 끈고히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마스크외교와 백신외교를 정치선전에 이용하는 것도 중국을 COVID-19 발병국이 아니라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책임 있는 대국의 이미지를 대내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전랑외교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모색하고 있는 반중 연대를 약화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다. 호주나 EU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발언과 경제적, 외교적 제재 조치는 자국의 경제력과 외교력에 기반한 미국의 동맹이나 협력국에 대한 압박으로 이해할 수 있다. COVID-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와 같은 압박을 통해서 반중 연대 참여국들이 중국을 의식하여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하려는 것이다.

시진핑의 3연임 등 국내정치의 안정화가 필요한 중국 내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은 앞으로

도 전랑외교를 지속할 뿐 아니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시진핑 정부는 3연임에 대한 명분과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핵심이익의 수호와 중화민족의 부흥을 더욱 강조하며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고취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들이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당당하게 싸우고 있다는 인식을 부각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와의 갈등과 분쟁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한중관계도 중국의 전랑외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외교와 가치 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동맹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년 12월 민주주의 정상회담 개최, G7의 G10 체제로의 확대 등이 전망되는 상황은 한국에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중견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려 할 것이다. 비록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그 참여 수위를 조정한다고 해도, 중국이 이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지난 7월 상하이밍(邢海明) 주한국 중국대사가 차기 대선 주자의 인터뷰에 대한 반박성 기고문을 내기도 했고, 중국 관영매체 역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난성 보도를 한 바 있다. 중국이 전랑외교를 시행하는 의도를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중국의 행보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은 국내정치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전랑외교를 유지 및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중국 외교의 유연성을 축소하는 양날의 검일지라도 시진핑 정부의 입장에서 국내정치의 안정이 한중관계의 발전보다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 교류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국이 중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중국은 잘 알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압박과 회유를 통해서 동아시아 내의 반중 연대를 약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중국의 전랑외교가 한국에게도 가해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 외교적 공세나 경제적 보복은 물론, 개정된 해경법과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발발할 수 있는 해상 충돌, 한중 간 문화 및 가치 갈등을 계기로 나타날 수 있는 민간 부문에 대한 비난과 여론 공격 등 다양한 압박 조치를 염두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박민희, “중국의 딜레마”, 한겨레출판, 2021.
- 서상민, ‘중국공산당의 위기관리 정치: ‘COVID-19’ 대응의 정치적 논리’, 중국지식네트워크, 2020.
- 이동규, ‘COVID-19 사태 이후 중국 시진핑 체제의 향배와 과제’, 아산 이슈브리프, 2020.03.
- _____, ‘COVID-19 팬데믹 이후 미중 갈등과 향후 전망’, 아산 이슈브리프, 2020.06.
- _____, ‘중국공산당 이데올로기 전략의 효용성 연구 - 중국의 정치사상교육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68권, 2020.12.
- 정상기, ‘중국의 ‘신형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 한국외교협회 외교광장 2019-14, 2019.07.31.
- 클라이브 해밀턴 지음, 김희주 옮김, “중국의 조용한 침공”, 세종서적, 2021.

영문 자료

- “A Decisive Stage for China’s Fight against COVID-19 Epidemic”, 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 2020.02.
- “Indo-pacific Strategic Report”(2019).
- ‘Unfavorable Views of China Reach Historic Highs in Many Countries’, Pew Research Center Report, 2020.10.06.
- Tony Saich, “Governance and Politics of China”, London: Palgrave, 2004.
- Zhao Dingxin, ‘The Mandate of Heaven and Performance i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China’,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3:3, 2009.
- Bruce Dickson, ‘Who Wants to be a Communist? Career Incentives and Mobilized Loyalty in China’, China Quarterly 217, 2013.
-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ourteenth to seventeenth periodic reports of China (including Hong Kong, China and Macao, China)’, UN CERD Report, 2018.08.30.

중문 자료

习近平, ‘把宣传思想工作做得更好’, “习近平谈治国理政”, 北京:外文出版社, 2016.
中国国务院, “2020年美国侵犯人权报告”, 2020.03.

인터넷 자료

- ‘중국 COVID-19 신규 확진자 100명 아래로 떨어져, 세계는 10만 돌파’, 파이낸셜뉴스, 2020.03.07., <https://www.fnnews.com/news/202003071544467135>.
-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하는 핵심 집단, 누굴까?’, 시사IN, 2021.06.17.,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21>.
- ‘시진핑, 중 통치체제 시험대…흔들리는 리더십에 위기감’, 한국일보, 2020.02.04.
- ‘中 외교부 대변인 “미군이 우한에 코로나 전염시켰을 수 있다”’, 중앙일보, 2020.03.13., <https://news.joins.com/article/23729349>.
- ‘코로나 중국책임론에 면죄부?...‘WHO 조사’ 미중 공방 가열’, 연합뉴스, 2021.02.10.,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0051300083>.
- ‘COVID-19: WHO 새 조사팀 출범...‘바이러스 기원 찾는 마지막 기회’’, BBC, 2021.10.14.,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8907297>.
- ‘중 “COVID-19는 미국에서 퍼트려” 선전 강화’, 파이낸셜 뉴스, 2021.08.07., <https://www.fnnews.com/news/202108070809124533>.
- ‘中외교관 “미국산 랍스터가 코로나 원인” 트윗...음모론 확산’, 동아일보, 2021.10.22.,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1022/109842699/1>.
- ‘중국인 10명 중 8명 ‘국제사회에서 중국 이미지 좋다’’, 한국경제, 2021.11.08., <https://news.v.daum.net/v/20211108102211284>.
- ‘중국 ‘홍색관광’ 젊은 세대에서 인기...“다양한 체험으로 활기”’, 한경, 2018.07.30.,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807303546Y>.
- ‘시진핑 후계자 조만간 등장’ 소문...천민얼·후춘화 상무위원 발탁설’, 국민일보, 2019.10.2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851641&code=61131111&cp=nv>.
- ‘巩固党和人民团结奋斗的共同思想基础’, “求是 2013/20”, http://www.qstheory.cn/zxdk/2013/201320/201310/t20131012_278250.htm.
- ‘观察 | 庚子春节, 阻击NCP’, 南方人物周刊, 2020.02.18., <http://nfpeople.com/article/>

9863.

人民日报, 2018.03.21, <http://lianghui.people.com.cn/2018npc/n1/2018/0321/c417507-29879341.html>.

‘新国家安全观四大内核’, 人民网, 2014.06.06.

‘一个美国视角下的中国“五四”精神’, The White House, 2020.05.04.,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5/2020-Pottinger-May-Fourth-Miller-Center-Speech.pdf>.

‘2020年12月10日外交部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中国外交部, 2020.12.10., https://www.fmprc.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t1839233.shtml.

‘China’s New Leadership Takes Hard-line In Secret Memo’, New York Times, 2013.08.19., <https://www.nytimes.com/2013/08/20/world/asia/chinas-new-leadership-takes-hard-line-in-secret-memo.html>.

‘Coronavirus: Li Wenliang’s death prompts academics to challenge Beijing on freedom of speech’, South China Morning Post, 2020.02.12., <https://www.scmp.com/news/china/politics/article/3050086/coronavirushundreds-chinese-sign-petition-calling-freedom>.

‘China’s Virus Censorship and Propaganda Draw Backlash’, Wall Street Journal, 2020.02.25., <https://www.wsj.com/articles/chinas-virus-censorshipand-propaganda-draw-backlash-11582632006>.

‘Coronavirus may have originated in lab linked to China’s biowarfare program’, The Washington Times, 2020.01.26.,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20/jan/26/coronavirus-link-to-china-biowarfareprogram-poss>.

‘Proclamation on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Concerning the Novel Coronavirus Disease (COVID-19) Outbreak’, The White House, 2020.03.13.,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presidential-actions/proclamation-declaring-national-emergency-concerning-novel-coronavirus-disease-covid-19-outbreak>.

‘Secretary Michael R. Pompeo at a Press Availability’, U.S. Department of State, 2020.05.20., <https://www.state.gov/secretary-michael-r-pompeo-at-a-press-availability-6>.

‘Senator Tom Cotton Repeats Fringe Theory of Coronavirus Origins’, New Yorks Times, 2020.02.17., <https://www.nytimes.com/2020/02/17/business/media/>

coronavirus-tom-cotton-china.html.

‘Widespread Outcry in China Over Death of Coronavirus Doctor’, New York Times, 2020.02.07., <https://www.nytimes.com/2020/02/07/business/china-coronavirus-doctor-death.html>.

Lara Jakes and Steven Lee Myers, ‘Tense Talks with China Left US ‘Cleareyed’ About Beijing’s Intentions, Officials Say’, New York Times, 2021.03.19.

‘2020年12月10日外交部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中国外交部, 2020.12.10., https://www.fmprc.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t1839233.shtml.

‘2021年6月2日外交部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中国外交部, 2021.06.02., https://www.fmprc.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t1839233.shtml.

‘国务委员兼外交部长王毅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回答中外记者提问’, https://www.fmprc.gov.cn/web/wjzb_673089/zyjh_673099/t1859110.shtml.

‘习近平在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人民网, 2017. 10. 28. <http://cpc.people.com.cn/n1/2017/1028/c64094-29613660.html>.

‘习近平在二十国集团领导人特别峰会上的重要讲话(全文)’, 新华社, 2020.03.26., http://www.gov.cn/xinwen/2020-03/26/content_5496106.htm.

‘习近平在第73届世界卫生大会视频会议开幕式上致辞’, 人民网, 2020.05.19., <http://ln.people.com.cn/n2/2020/0519/c378333-34027265.html>.

‘China COVID-19 Vaccine Tracker’, <https://bridgebeijing.com/our-publications/our-publications-1/china-covid-19-vaccines-tracker/>.

‘这 10 个问题, 美国必须给全世界一个真相!’, 人民网, 2020.05.01., <http://m.people.cn/n4/2020/0516/c57-13955551.html>.

A S A N
R E P O R T

중국 전랑외교의 함축성과 전망

발행일 2021년 12월

지은이 이동규

펴낸곳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03176)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등록 2010년 9월 27일 제 300-2010-122호

전화 02-730-5842

팩스 02-730-5849

이메일 info@asaninst.org

홈페이지 www.asaninst.org

편집 디자인 EGISHOLDINGS

ISBN 979-11-5570-239-0 95340 (PDF)



ISBN 979-11-5570-239-0